이재명, ‘인적 쇄신’ 으로 내홍 잠재울까

당직 개편 ‘지명직 지도부’ 유력
친명 반대·검찰리스크 등 변수
이, 두루 의견 듣고 결단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장기화하는 당 내홍을 수습하고자 한껏 몸을 낮추며 대책을 고민 중이다.

자신의 강성 지지층을 향해 당 비명(비이재명)계 공격을 중단해달라고 강경한 목소리로 요청하는가 하면, 최근 의원총회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지면 내 정치도 끝난다”며 결연한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의총 발언을 두고는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질서 있는 퇴진론’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당분간 현 지도부에 대한 지지와 신임을 호소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표가 비명계 반발을 가라앉히기 위해 추가로 보일 ‘액션’ 으로는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미래(더좋은미래)가 요구한 당직 개편, 즉 인적 쇄신이 거론된다.

그간 비명계는 물론 계파색이 옅은 중간 지대 의원들까지도 현 지도부가 ‘친명(친이재명) 일색’ 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온 것이 사실이다. 이 대표가 당직 개편을 감행한다면 지명직 지도부를 교체하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이와 관련, 비명계 일부는 내년 총선 공천권과 밀접한 사무총장은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비명계 한 의원은 “인적 쇄신이라고 한다면 교체 폭이 지명직 최고위원 정도로 그치지 않아야 한다”며 “사무총장은 물론 전략기획위원장, 대변인까지 모두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명계에선 현시점의 당직 개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새 지도부가 출범한지 고작 반년밖에 지나지 않은 데다 떠밀리듯 하는 조직 개편은 쇄신 효과를 반감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친명계 주장이다. 아울러 개편을 단행하더라도 그 폭을 놓고 되레 당내 갈등과 파열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당내 인물난도 고민거리다. 2021년 4·7 재보선과 지난해 3·9 대선, 6·1 지방선거까지 연패하면서 당 지도부가 여러 차례 바뀐 데 따른 탓이다.

한 중진 의원은 “전략이든 정책이든 이젠 적임자 찾기도 쉽지 않다. 한번 했던 사람을 쓸 수도 없지 않으냐”며 “이 대표로선 결단을 한다 해도 퍼즐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적 쇄신 실행 여부나 그 시점에는 현재 진행형인 ‘검찰 리스크’ 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를 기소할지, 그에 앞서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분 수습책인 ‘당직 개편’ 카드를 쓸 타이밍을 재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단 이 대표는 개별 의원과 일대일 면담, 그룹별 간담회 등을 통해 당내 의견을 두루 듣고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오는 21일 김근태계 모임인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추진 중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당직 개편과 관련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이 대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소통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컨벤션효과 실종 돌파구 부심
‘김기현호’ 민생 행보 시동
민생특위 위원장에 조수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통해 출범한 ‘김기현호’ 가 이번 주부터 민생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약 2주 만에 ‘실종’ 된 상황에서다.

전대 이후 국민의힘은 ‘낙지없는 연포탕’ 이라 지적을 받은 친윤 일색 지도부 인선에다,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 시간제 혼선 및 대일 외교 논란 같은 외생 변수까지 더해지며 지지율 하락세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김 대표는 민생 관련 메시지나 행보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성과 평가 및 후속 조치 논의가 주요 안건이었지만, 남부 지방의 극심한 가뭄 등 민생 문제도 공식 의제로 다뤄졌다. 김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민생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민생특위 위원장에는 조수진 최고위원을 임명해 무게감을 더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21일에는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중구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이달 말 출시 예정인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 상품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듣고서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이후에는 MZ세대에 초점을 맞춘 민생 행보를 진행할 방침이다.

주 69시간 근로시간제 추진이나 고물가로 외식비가 크게 오른 상황 등 청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와 관련된 상징적 장소를 찾아 대책을 논의하고 메시지를 발신한다는 게 김 대표 측 설명이다.

다만, 김 대표가 민생 드라이브를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당직 인선이 마무리돼 ‘김기현 체제’ 가 공고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달 말까지 30여개에 달하는 당 상설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본부장 선임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위안부·독도 의제 논의 안돼”
박진 “언급 적절치 않아”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6일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라든지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KBS 9시 뉴스에 출연, 일본군 위안부나 독도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다는 취지의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진행자가 ‘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는 것은 기시다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 말을 꺼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 고 거듭 묻자 박 장관은 “정상회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일본 교도통신은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2015년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이 문제가 최소한 양국이 합의한 의제로는 다뤄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거론했을 가능성까지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2015년 한일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시 합의에 따라 일본이 ‘화해·치유 재단’ 에 출연했던 10억 엔의 잔여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가 남아있다. 합의 시점 기준으로 생존했던 피해자 총 47명 중 34명, 사망 피해자 199명 중 58명에게 치유금 명목으로 총 44억원이 지급된 후 56억원가량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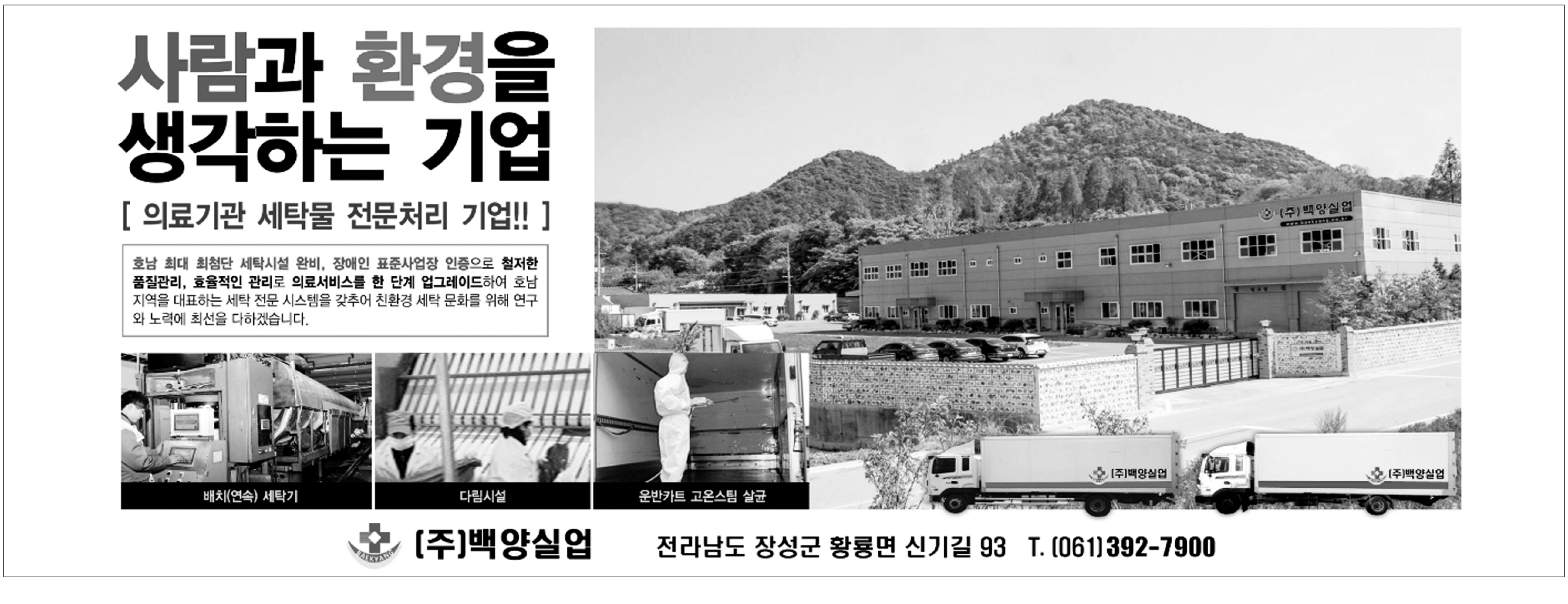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3차 범국민대회’ 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정상회담, 망국적 조공외교”

주말 서울 도심 곳곳 집회

한일역사정의공동행동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대일 굴욕외교 규탄 3차 범국민대회’ 를 열고 최근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망국적’ 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역사·정의·경제·군사·안보·피해자 인권 모두를 팔아넘긴 조공외교”라며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와 독도 문제 해결이라는 일본 정부의 새로운 숙제까지 들고 왔다”고 주장했다.

참가자 약 3,000명은 파란 풍선과 팻말을 들고 ‘강제동원 굴욕외교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오후 3시 20분께부터 광화문광장을 거쳐 주한 일본대사관까지 행진한 뒤 일장기에 야유하고 오후 4시께 해산했다. 행진으로 세종대로와 사직로 3개 차로가 통제됐다. 진보성향 단체인 촛불행동이 숭례문 인근에서 연 집회에는 오후 5시 기준 7,000명 넘게 참가했다.

이날 집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역술인 천공 등을 묘사한 모형이 등장했다. 일부 시민은 트럭에 실린 모형을 주먹이나 소주병 등으로 때리고 사진을 찍었다. 주최 측은 “집회에 참여한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